

광주대 학교발전기금 놓고 '시끌'

광주대학교가 학교발전기금을 놓고 안팎으로 흥역을 치르고 있다.

'발전기금 자료를 공개해 달라'는 시민단체 요구에 비공개 결정을 내린 데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비공개 대상이 아니다"며 취소 처분하는가 하면 발전기금 부당징수를 문제삼은 교수는 '보복 징계'를 주장하며 부당해임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학 측은 "발전기금은 자발적으로 거뒀고, 해임은 직무 태만과 연구비 부당수령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였다"고 반박, 진실 공방으로 번지고 있다.

15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등에 따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시민모임 측이 광주대를 상대로 청구한 정보공개 결정 취소 행정심판에서 "대학 측은 정보공개 이의신청 거부를 취소하라"고 결정했다.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라는 현행 정보공개법 제9조의 단서조항인 8가지 예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시민모임은 대학 측이 지난해 8월 교육부 대학역량평가를 앞두고 교수들의 급여 일부를 본인 동의없이 징수한데 대해 보건행정학과 A교수가 '변칙적인 징수'이며 기금악정서 서명을 거부하는 등 강하게 문제삼아 A교수를 교육부 평가 두 달 전 해임 처분했다.

정계 사유는 크게 2가지로, 교외활동으로 인해 휴강한 수업을 보강하지 않은 점과 같은 논문으로 16만 원의 연구비를 두 차례 받은 점을 들었다.

그러나 대학 교원의 지위를 박탈하기에는 사유와 근거가 약하다는 문제제기가 일기 시작했고, 이에 시민모임은 '합당한 정계'를 요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발전기금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문서목록을 공개할 것을 요구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자 같은 해 11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모임 행정심판 활동가는 "대학 측의 비공개 처분은 중앙행정심위의 법적 권위(유권해석)를 벌리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며 "(정보 비공개라는) 행정 행위의 정당성을 밝히기 위해서라도 대학 측은 관련 정보를 떠올리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A교수가 대학 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임 취소 소송은 오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첫 재판이 열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대학 측은 발전기금 부당징수와 보복 해임 논란에 대해 전면 부인하며 '사실 호도'라는 입

중央행심위 "발전기금 정보 비공개 대상 아니다"

발전기금 부당징수 문제제기 교수 보복해임 공방
대학 측 "자발적 기부, 해임은 직무 태만 등이 커"

장이다.

대학 측은 '보강수업과 출결 관리 소홀 등 직무 태만으로 학생들의

팀원이 잇따랐고, 허위 논문 실적으로 연구비를 부당 수령한 사실이 확인되는 등 고등교육자인 대학교수

로서의 품위 손상이 커 해임이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또 발전기금과 관련에서는 'A교수는 기부금 약정서를 자발적으로 서명했고 불참자들에게는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았다'며 'A교수가 기부금 문제로 징계위에 회부됐고, 보복성 해임을 당했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조인호 기자



시원하게 뿐어져 나오는 분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며 전북 전주시의 최고 기온이 영상 28도를 보인 15일 전북대학교 교정에서 학생들이 시원하게 뿐어져 나오는 분수를 바라보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작년 불법 주·정차 연계 교통사고 8만6천건 달해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8만6000건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행정안전부(행안부)는 보험개발원에 의뢰·분석한 2018년도 순회보험회사 교통사고 기록 결과를 15일 공개했다.

이 결과를 보면 지난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 발생 건수는 총 8만5854건이다.

이는 순회보험회사에 접수된 사고 기록만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사인 간 합의 등으로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를 포함하면 그 건수는 더 늘어난다.

연령대별 인명 피해는 주요 운전자 총인 20~50대(5846명·76.4%)가 많았다. 60대 이상 고령자(1114명·14.0%), 어린이(515명·6.7%), 청소년(174명·2.3%) 순이다.

물적 피해가 많이 발생한 광역지 자체 1~3위까지는 인명 피해 순위와 같았다. 경기(1만8809대), 서울(1만7835대), 부산(6768대)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자치단체는 경기 안산(2304대),

경기 수원(2114대), 경남 창원(2085대), 전북 전주(1811대), 충북 청주(188명)

대인 오후 5~7시 사이(인적 피해 15.6%, 물적 피해 15.3%)가 가장 높았다.

(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151명) 등의 순이었다. 읍·면·동의 경우 경기 시흥·정왕본동(439대),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5동(306대), 제주 제주시 이도2동(286대), 제주 제주시 노형동(246대), 경남 김해 북부동(210대) 순이다.

자동차보험 기입대수 1만대 당사고 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인명 피해의 49.4%(3779명), 물적 피해의 50.2%(4만3041대)가 정오(낮 12시)에서 오후 7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고 비율은 퇴근 시간 대인 오후 5~7시 사이(인적 피해 15.6%, 물적 피해 15.3%)가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 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한다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사고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뉴시스

지난해 불법 주·정차로 인해 발생한 교통사고가 8만6000건에 달한다는 집계가 나왔다.

(174명), 광주 광산구(155명), 경기 수원(151명) 등의 순이었다. 읍·면·동의 경우 경기 시흥·정왕본동(439대), 전북 전주 완산구 효자5동(306대), 제주 제주시 이도2동(286대), 제주 제주시 노형동(246대), 경남 김해 북부동(210대) 순이다.

자동차보험 기입대수 1만대 당사고 차량 수는 전국 평균 38대였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인명 피해의 49.4%(3779명), 물적 피해의 50.2%(4만3041대)가 정오(낮 12시)에서 오후 7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특히 사고 비율은 퇴근 시간 대인 오후 5~7시 사이(인적 피해 15.6%, 물적 피해 15.3%)가 가장 높았다.

이번 조사를 수행한 장재일 보험 개발원 팀장은 "보험사에 접수되지 않은 사고까지 합한다면 불법 주·정차와 연계된 교통사고는 훨씬 많을 수 있다. 사고 심각성에 대해 진중하게 인식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시 당국은 용의자 체포를 돋는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2500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고 코네티컷주 무슬림연맹에서도 14일 오후 6만6000달리를 현상금으로 내 걸었다.

코네티컷 주의회도 민주 공화당 원내 단체들이 공동으로 향후 주 전체의 교회, 모스크 등 예배장소의 보안강화 비용으로 최고 500만달러까지 풀기로 합의했다.

이를 발의한 시우스 원자 출신의 사우드 안와르 주 상원의원은 앞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교회와 유대 성전, 회교 시원 등을 보호하는 데 힘력을 받게 해주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이미 학교들에 대해서 정부 개폐 원격조종장치, 감시 카메라 설치,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창을 설치한 것처럼 종교 시설에도 보안강화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미서 잔혹범죄 이력 인물이 공유차량 운전

미국에서 고문 및 잔혹범죄 이력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인물이 차량공유서비스 '우버'와 '리프트' 기사로 등록해 활동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들에 대한 검증 논란이 끊이지 않는 모양새다.

14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소말리아 군 사령관 출신 유수프 압디 알리는 지난해까지 18개월 이상 우버 및 리프트 운전자로 활동했다. 알리에 대한 재판은 아직 진행 중이지만 인터넷에는 그가 1980년대 소말리아에서 군 사령관으로 활동하며 잔혹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이 뉴스 등으로 남아있다.

그는 과거 '투케 사령관'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했으며, 그가 지휘한 소말리아 북부지역 발생 살인사건들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캐나다에서 제작되기도 했다. 다큐멘터리에는 목격자 진술을 토대로 두 남성을 나무에 매달아 산 채로 불태운 잔혹한 사건 등이 담겼다.

국제범죄자들에 대한 처벌을 추진하고 피해자를 돋는 비정부기구 '트라이얼러티네셔널'에도 알리의 범죄이력 및 그에 대한 재판 진행 상황이 올라와 있다.

CNN에 따르면 알리는 직접 자신의 차량에 탑승한 기자들에게 신청 며칠 만에 차량공유서비스 운전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종일 제로 일했으며, 간단한 신원조회 외엔 운전자 등록에 별다른 진입장벽이 없었다고 한다.

우버와 리프트는 CNN이 이 사건 조사를 시작하자 알리의 차량공유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접속을 정지시켰다.

앞서 CNN은 지난해 6월에도 우버와 리프트가 범죄전력 있는 수천명을 상대로 운전자격을 승인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를 중에는 살인을 저지르고 가석방 중인 사람이 포함됐으며, 일부 운전사는 승객 대상 성폭행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멕시코 휴양지서 총기난사로 1명 사망

멕시코의 휴양도시 플리야 델 카르멘에서 13일 밤(현지시간) 2명의 무장 남성들이 술집으로 쳐들어와 권총을 마구 발사하면서 1명이 숨지고 11명이重상을 입었다고 현지 경찰이 발표했다. 총격 사건이 난 술집은 플리야 델 카르멘의 관광 중심지에서는 비교적 멀리 떨어진 해변에 있다.

퀸타나 로 주의 관광진흥위원회는 14일 성명을 발표하고, 사고로 인한 사상자 가운데 관광객은 없었다고 밝혔다. 사건 초기 발표로는 이 번 총격이 범죄조직들 간의 대립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되어 있다.

위원회는 그 동안 주 정부와 지도자들이 인기 있는 관광지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감시 카메라 설치와 경찰 병력의 현대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말했다.

플리야 델 카르멘에서는 이 전에도 거리 미약 조작물간의 거래 싸움에서 총격전이 벌어진 적이 있다고 경찰은 말했다. 지난 해 6월에도 이 도시의 빈민지역에서 총격전으로 7명의 남성이 목숨을 잃었다.

미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회교사원에 방화

미국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시에 있는 한 회교사원에서 주 밤에 일어난 화재가 일부러 발화 물질이나 기구를 이용해서 불을 지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AP통신 등 미국 매체들이 14일 보도했다.

하트포드의 토니 하프 시장은 12일 오후부터 시작된 현장 감식 결과 시내 다이아벳 모스크의 2개 층이 불탄 것은 고의로 방화한 것으로 밝혀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화범에 대해 시 당국이 모든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서 체포·처벌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어떤 장치로 불을 지른 것인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시 당국은 용의자 체포를 돋는 결정적 제보자에게는 2500달러의 상금을 주기로 했고 코네티컷주 무슬림연맹에서도 14일 오후 6만6000달리를 현상금으로 내 걸었다.

코네티컷 주의회도 민주 공화당 원내 단체들이 공동으로 향후 주 전체의 교회, 모스크 등 예배장소의 보안강화 비용으로 최고 500만달러까지 풀기로 합의했다.

이를 발의한 시우스 원자 출신의 사우드 안와르 주 상원의원은 앞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는 것이 교회와 유대 성전, 회교 시원 등을 보호하는 데 힘력을 받게 해주고 보안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로 이미 학교들에 대해서 정부 개폐 원격조종장치, 감시 카메라 설치, 깨지지 않는 방탄 유리창을 설치한 것처럼 종교 시설에도 보안강화가 경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정부 3.0

모두, 안녕하세요?

탄생의 순간부터 평생 동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가 함께 합니다.

국가건강검진

우리 미처 아는 바
자체치료증에 있습니다.

처음엔 많이 놓쳤지만,
영유아건강검진으로 일찍, 일찍!
부모로서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워야 하는지 잘 알게 되었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더불어
안녕이라 말을 다시 돌아봅니다.

대한민국 부모님들,
다들 안녕하시죠?

영유아건강검진 증 제제조기밀건
제제치료 증인 민혁군

발달
건강검진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구강
검진

암
검진

**영유아
건강검진**

영유아건강검진은 생후 4개월부터 71개월까지의 모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령에는 검진기준이 초월화하거나, 미리 미리 검진 받으세요.

보건복지부

h-well

국민건강보험

| 고객센터 123 | | 고객센터 1577-1000 |